

“묵묵히 소명 절차 밟아 갈 것”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민주 전북도당 후보검증위 ‘부적격’ 판정에
“알선수재 등 전력, 중앙당서 충분히 소명된 사안… 이의 제기 통해 재평가 받을 것”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민선 4기·5기 완주군수)가 지난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민주당 전북 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알선수재 등 범죄경력을 문제삼아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은 이미 정치적 사건으로 중앙당에서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고 밝히며 “지난 2008년과 2010년 완주군수 출마 시절에 정치적 사건의 희생양으로 판단해 두 차례 공천을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임 예정자는 또, “이번 부적격 결정이 민주당 중앙당의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기준과 전혀 부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중앙당이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한 7대 중 대범죄 항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임정엽 전 원주군수가 지난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검증위원회의 결정이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원칙 없고 근거 없고 방향성조차 없는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복당파를 다시 짓누르는 일련의 파워게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선에 둘인이라는 중앙당 선대위 방침에 따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명 후보 당선을 목이 쉬도록 외쳤다”고 회고하고, “대선패배 이후 이제명 대선 후보가 의친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령과 과감한 복당조치 등 개혁적 조치가 거꾸로 가지 않을까 우려감”도 표명했다.

끝으로, 임정엽 예정자는 “이미 중앙당의 검증이 끝난 사안을 지역당 위원회에서 뒤집은 것은 계파 간 이해에 따라 강행한 적폐적인 행태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비분명하게 하는 마음으로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이의 신청과 재심사 등 중앙당의 소명 절차를 묵묵히 밟아 가면서 민주당의 청탁정신과 신뢰받는 정치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젊음·유능함을 무기로 완주 황금시대 열 것’

두세훈 변호사, 도의회에
사직서 제출 후
군수 예비후보 등록

두세훈 변호사가 더 큰 봉사를 위해 지난 25일 전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완주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두 변호사는 “담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역에 더 큰 봉사를 위해 담대한 도전을 결정했다”면서 “젊음과 유능함을 무기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완주군 황금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두 의원은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담대한 희망을 가지고 주의회 상원의원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도전했듯이 지역에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 전북도의회를 떠난다”며 사직 의



두세훈 변호사가 더 큰 봉사를 위해 지난 25일 전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완주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시를 밝혔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고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 정신을 실천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지난 2018년 2년에 걸쳐 전북도의 대한관광부진과의 소송 문제를 도정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은 선배·동료 의원님의 도움과 격려 덕분이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덧붙여, 두 의원은 “그동안 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 도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안고 전북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봉동 출생인 두세훈 변호사는 봉동초·완주중·전라고·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1대 죄연소 전북도의원을 역임했다.

또한, 두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 구성

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부위원장에 이재운 전 교수
비대위 의결 후 공식 활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지난 25일 오전 6·1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했다.

이날, 제17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관위 위원장으로 윤준병 국회의원(정을·고장)을 부위원장으로 이재운 전 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공관위원회는 총 18명으로(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6명) 구성했으며, 외부인사 8명(44.4%), 여성 9명(50%), 청년 3명(16.7%)가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도당 위원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이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겠다”며 “또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청년과 여성의 기회 확대는 물론,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당이 구성한 공관위는 이번 주 초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결친 뒤,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어르신 위한 파크골프장 재정비·확대 설치”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완산구 서신동 미전교 파크골프장과 덕진구 화전동 온고을 파크골프장 등 2곳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최근 파크골프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선호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타지역의 경우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경상북도 구미시와 강원도 양양군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2곳 모두 편의시설 미흡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마

전파크골프장은 18홀 중 9홀에는 잔디 조차 깔려 있지 않아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조지훈 예비후보는 파크골프가

어르신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에 활용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우선, 미전 파크골프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화장실 확장과 함께 편의시설을 보완·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 척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유휴부지를 확보해 파크골프장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는 파크골프가 특정 계층만 즐기는 문화가 아닌 말 그대로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자리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에 척계적인 운영·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시설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친환경 착한소비… 천기저귀 지원 시행”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며 친환경 착한소비의 일환으로 천기저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드레 기저귀 사업단(전주시 평화동)에서 월 2만 원을 받고 기저귀 수거에서 세탁, 배달까지를 책임지며 주부들의 번거로움을 덜고 천 기저귀 사용 확대를 돋고 있다.

하지만 “천기저귀는 불편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천기저귀 사업단 운영이 쉽지 않다”며 범시민 캠페인이나 자자

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전주교도소 이전 보상, 현 시장 임기 내 끝내야”

이남숙 전주시의원

전주교도소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이전부지 보상 문제 협의를 현 시장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남숙(동서학·서서학, 평화·2동) 의원은 지난 25일 제3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도소 이전을 위해 현 시장 임기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접속해 차기 집행부가 그간의 추진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교도소 이전을 건의한 시점은 2002년으로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다.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뒤로 물러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작지마’ 부근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부지 선정 이후에도 보상과 관련해 주민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추진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현 부지 활용방식 역시 문화·관광·재생 프로젝트부터 국립과학관 유치, 완산경찰서 이전 추진 논의까지 명확한 방향성 없이 표류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2020년 9월 시정 질문을 통해 교도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시장은 법무부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2023년까지 신축공사 완료와 함께 기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이 계획대로 추진됐나”며 지지부진한 이전 사업에 대한 문제를 꾸집었다.

사업 지역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5년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 당시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4년으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주민 요구사항과 보상 가격 변동 등으로 예산 역시 지속 증가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나 그 보상이 투기세력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시장 추진의 속도감을 확보하되 충분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평화동 주민이 교정시설로 인한 생활 불편을 기약 없이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 333억원을 확보한 만큼 보상 협의는 일정이 반드시 추진해 그동안 가로 막혔던 남부권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공디자인에 적극 시민 참여 필요”

이경신 전주시의원



구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중의 눈은 학문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 경관시설 물 전체가 주

는 이미지는 충분히 왜색 논란을 일으킬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관 조성 방식은 전문가가 결정했으나 알아서 따르면 된다는 식”이라며 “전 시장 시설 아트플라스 사업과 현 시장 때 전민그루도시정원 사업이 그렇다”고 말했다.

시의 전반적인 공공시설물과 경관시설물 설치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각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실무부서 공무원의 경험과 의견은 무시되고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생각으로 비워버린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모를 통해 결정된 설계 작품의 배치와 건축 계획 등이 모두 바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가련·건지산 일대 패밀리·키즈랜드 조성”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정책선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에 변변한 놀이 시설 하나가 없어 우리 시민들께서 터지로 여행을 가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의 외부 유출은 물론이고 이동 경비와 시간은 낭비되고 있다. 도시의 자부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전통적인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만난 많은 시민들이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동물원 안에 있는 시설은 너무 비싸고 타 지역의 유사한 시설과 비교했을 때 놀이공원이라고 하기에

도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가련산·건지산·동물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1조 원을 투자해 전주패밀리·키즈랜드를 조성해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형 워터파크, 놀이시설, 식물원(생태학습장)·캠핑장, 잔디광장, AI藓체로 ▲키즈골프장, 키즈미술관, 공연장·영화관·▲동물원 관람환경 개선 ▲호텔, 스파 ▲전주명예전당, 가든스 베어(대표 상징물) 등 5개 분야 15개 시설 및 공간 등을 포함한다.

이를 143만㎡(43만평)의 부지에 2023년부터 2030년 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사업에 약 1조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시비 1,000억 원, 민자 9,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